

북한경제의 상황과 북한경제 연구

임강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tlim@kinu.or.kr

최근 북한경제 연구자들의 우선적인 고민은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와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기초로, 북한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특히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북한경제의 상황 변화를 객관적·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료의 부족으로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1. 연구주제

최근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주제는 대체로 경제운용의 정치적 배경 및 특성, 경제정책의 변화(가능성),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상황의 주요 특징, 시장(장마당)의 확산 실태,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경제관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들 중요한 연구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중 개인적으로는 경제정책과 경제실태에 대한 평가와 그것들의 변화 가능성에 가장 관심이 많다.

이에 북한경제의 정책과 실태 및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춰 본다면, 국내의 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정책효과가 경제실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변화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전망 또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김정은 체제 출범 5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첫째, 북한경제의 대내외 환경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적으로는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일반주민들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이 경제운용에는 여유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반면에 국가의 비통제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외적 환경 악화가 아직까지는 북한경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점차 파급효과가 증대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환경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외부에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국과의 경색관계 지속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대외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이은 추가 경제제재(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북한의 보다 격렬한(?) 대응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북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경제관리 부분에서 혁신적인 조치의 가능성이 주목을 끌었지만, ‘포전담당책임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를 공식적으로 강조한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활동에 대한 당국의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정책이 관찰되고 있다.

넷째, 최근 북한경제의 실태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많은 부분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많아지고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에 놀라게 된다고 한다. 단동에서 바라보는 신의주 시가지의 모습에서 관찰되고 있듯이 최근 몇 년 동안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등 전에 없이 활발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 상품의 생산이 북한 내부에서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고 식당 등 서비스업의 영업활동과 진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통해 일반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력생산부문과 철도부문 그리고 중공업부문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확장된 평양 순안공항을 제외하고는 SOC에 대한 투자도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양극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여전히 다수의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의 경제협력에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경제개발구 도입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자본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데,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전까지

는 본격적인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유엔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한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미국 등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든지, 중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통해서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내하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이슈는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한 실태파악에 표본의 대표성 등을 포함한 한계점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각이나 경험들이 북한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심층인터뷰조사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나 직업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탈주민들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학술적 용어에 익숙하지 못해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최근 20여 년 동안 북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북한문제를 다루는 학문분야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으며, 경제분야에서는 각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분석방법론이 지속적으로 도입·발전되거나 다른 학문분야와의 융합연구가 체계적으로 시도된 사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를 포함하여 북한연구가 학문적으로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경제를 포함한 북한연구가 다양한 방법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주요 연구수요자가 정부기관이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기관들의 예산지원이나 용역 발주가 연구프로젝트의 주요 재원을 형성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자원조달의 부담을 갖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구에 몰두하기 어려운 환경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크다.

III.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연구영역

1. 북한 시장화의 새로운 특징에 주목할 필요

북한경제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식(국영)부문 실태에 대한 분석을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다는 걸림돌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시장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영부문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시장화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국영부문의 적극적인 시장영역 활용 경향은 북한의 시장화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에 대한 연구는 국영부문의 역할과 동태적 현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시장화에 대한 이론적 재규명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 일반주민들의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연구

그동안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국내 북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경제정책, 공식(국가)부문 경제실태, 경제성장율,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등 북한당국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최근 시장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활동의 주역은 일부 국영기업 관계자들과 당국과 결탁한 돈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돈주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반면에 시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주민들의 경제적 삶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장화의 진전 등 최근의 경제상황이 일반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일반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이 거의 붕괴된 이후 일반주민들의 사회안전망이 해체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내몰린 일반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단위에서 경제적(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다.